

명품 플랫폼 발란 ‘기업회생’ 추락… 버티컬 커머스 ‘위기감’

2023년부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 머스트잇·트렌비도 실적부진 겪어 “중소업체 무너질 신호탄” 우려 커 발란, 회생과 ‘M&A병행’ 방침 밝혀

한때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주목받았던 버티컬 커머스가 위기의 문턱에 섰다. 입점사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명품 플랫폼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버티컬 커머스 시장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입점사 여러분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발란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발란의 위기는 유동성 검색에서 비롯



발란 부티크 CI 이미지.

/발란

됐다. 실제 발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발란은 2023년 자본총계 -77억원으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성장 한계에 부딪혀 반등에 실패한 발란은 지난 24일,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들며 플랫폼 입점사들에게 정산 대금 지연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28일 지급 일정 계획을 공지하

겠다고 밝혔으나, 사과문을 올리는 데 그쳤고 상품 구매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에 나섰다. 명확한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발란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 사태가 버티컬 커머스 시장 위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버티컬 커머스는 2010년대 이커머스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전자상거래 모델이다. 기존 종합형 판매 모델인 일반 이커머스와 달리, 특정 상품군에 집중하여 소비층의 취향과 관심사를 공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그렇던 버티컬 커머스가 소비 침체라는 거시적 위기와 맞물려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의류와 명품 등 소비재부터 소비를 줄이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발란과 함께 명품 버티컬 플랫폼 1세대로 불렸던 머스트잇과 트렌비도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머스트잇은 7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트렌비 역시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3분의 1로 축소됐다. 이 외에도 가전·가구 플랫폼인 알렛츠와 디자인 상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었던 천삼백케이 등이 지난해 폐업하며 버티컬 사

업에서 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은 중소 버티컬 업체들이 차례로 무너질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의 핵심은 신뢰인데, 티몬 사태에 이어 발란까지 미정산 문제가 불거지면 플랫폼을 믿고 입점하려는 셀러가 있을 리 없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소비자 수요까지 줄어들면 플랫폼 업체들이 버티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 회생이 법원에 본격적으로 인가되기 전,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발란이 인수합병이 되겠냐”, “발란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단계적 추경 처리” vs “규모 적고 부실”

〈興〉

〈野〉

10조 추경예산에 ‘이견’

국민의힘 “이견 없는 부분 먼저 처리 조기처리, 산불 이재민 실질적 혜택”

민주당 “이 정도로 민생회복 되겠나 ‘국회심사 생략하자’ 꿈수 더 가관”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추경 규모와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요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꼽으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야가 쟁점이 없는 사업만 편성에 민생 회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31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여

야의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답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통상대응, 재난 대응 세가지 부분인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조기 처리 되면 산불 이재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25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아니라서 여야간 이견 없는 부분까지 문제 삼고 흡입을 내려하는데,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라며 “이견 없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먼저 처리하고 우리 당이 주장하는 부분,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 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계적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추진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

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을 행사해볼까 하는 꿈을 생각 하나. 그리고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영남권 산불 피해를 지원할 재난대응 예비비 추가 편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 대에 불과하고 전 부처에서 예산을 끌어모아도 1조원 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에 3조~4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사용해 예비비 증액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글로벌사우스 시장 선제적 개척”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비 우리기업 이익 보호위해 지속협업”

미국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글로벌사우스 시장 등 대체시장 발굴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31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14개 거점을 신설·강화하는 등 대체시장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가전·디스플레이·이차전지·소재부품 등 수출업체와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체시장 발굴 지원과 함께,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 수출현장 지원단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수출업체가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업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극복을 위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원을 산업·에너지분야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올해 성장률 0.7%p 내린 1.5% 예측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지난해 10월 예측치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예정처는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년 NABO(예정처) 경제전망 발간’ 보고서를 발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세계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고, 추경 예산은 편성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전망에 반

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 약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으며, 제조업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외부문에서 총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총수입은 내수 및 수출 수요 둔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육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박태홍 기자

작년 법인파산 1940건… 10년래 최대

▶▶ 1면 ‘고금리·소비위축에…’서 계속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비은행권으로 밀리면서 상환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 법인파산건수 10년 내 가장 높아

대법원의 법인 통계 월보를 보면 지난해 법인파산 건수는 1940건으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2015년 587건이던 법인파산 건수는 2020년 1069건으로 82% 증가한 뒤 지난해 2020년보다 81% 늘었다. 법인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개인회생으로 하면서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만9498건으로 1년전(12만1017건)과 비교해 8481건 늘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경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는 것보다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